

나.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(시행령)

☐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을 규정

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

②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

※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(민병두, 김관영, 김종희 의원안)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

다.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(시행령, 감독규정)

☐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도입(감독규정)

○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(정례회)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

* 금투업('18.8.31일), 지주회사('19.1.31)에 既도입

☐ 인가요건 정비(시행령, 감독규정)

○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(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)을 통일적으로 정비*하고,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**

* 예 :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
→ “최근 5년간 요건” 삭제

** 예 :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

3. 향후일정

☐ 규개위, 법제처 심사를 거쳐 '19.6.12일 시행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